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5일 (음력 12월 10일) 화요일

## ‘광주형 일자리’ 기대감…文대통령 추진 의지

노사[吧]정 상생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신년 초부터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최종 협약 체결 무산된 데 대한 절부와 여당·광주시·현대차·노동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타결 잇계점을 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노사 상생도시 광주의 초

### 연초 신년사·신년기자회견서 강한 추진 의지 표명

#### 이해찬 민주 대표 청진호·이용섭 광주시장 협상 재개

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이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시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유일한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타결 직전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 시장은 협상 타결 시한을 언급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시장은 “협상 상태가 있어 시한을 정하는 게 예의가 아니고 (시한을 정할 경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들어 두 번 말하고 정차권과 광주시민, 온 국민이 성원하고 있는 민족 하루라도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와도 꾸준하게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 상생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4급 상당의 노동협력관을 신설해 현재 공모 중이고,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 상당 전문 임기제)를 임명해 노동문화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 시장을 특별 보좌 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비와 돌파구가 필요하며, 노사 상생의 사회네트워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노사 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인 완성차 공장의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의 무게감을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에 이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이다”며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 같다”고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勞)와 사(使),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을 기준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생산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리ーン단 내 62만 8000여㎡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SUV를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진행해왔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이 빌목을 잡으면서 최종 타결 일보 직전인 지난해 12월5일 무산됐다.

서은홍 기자

Photo 漫評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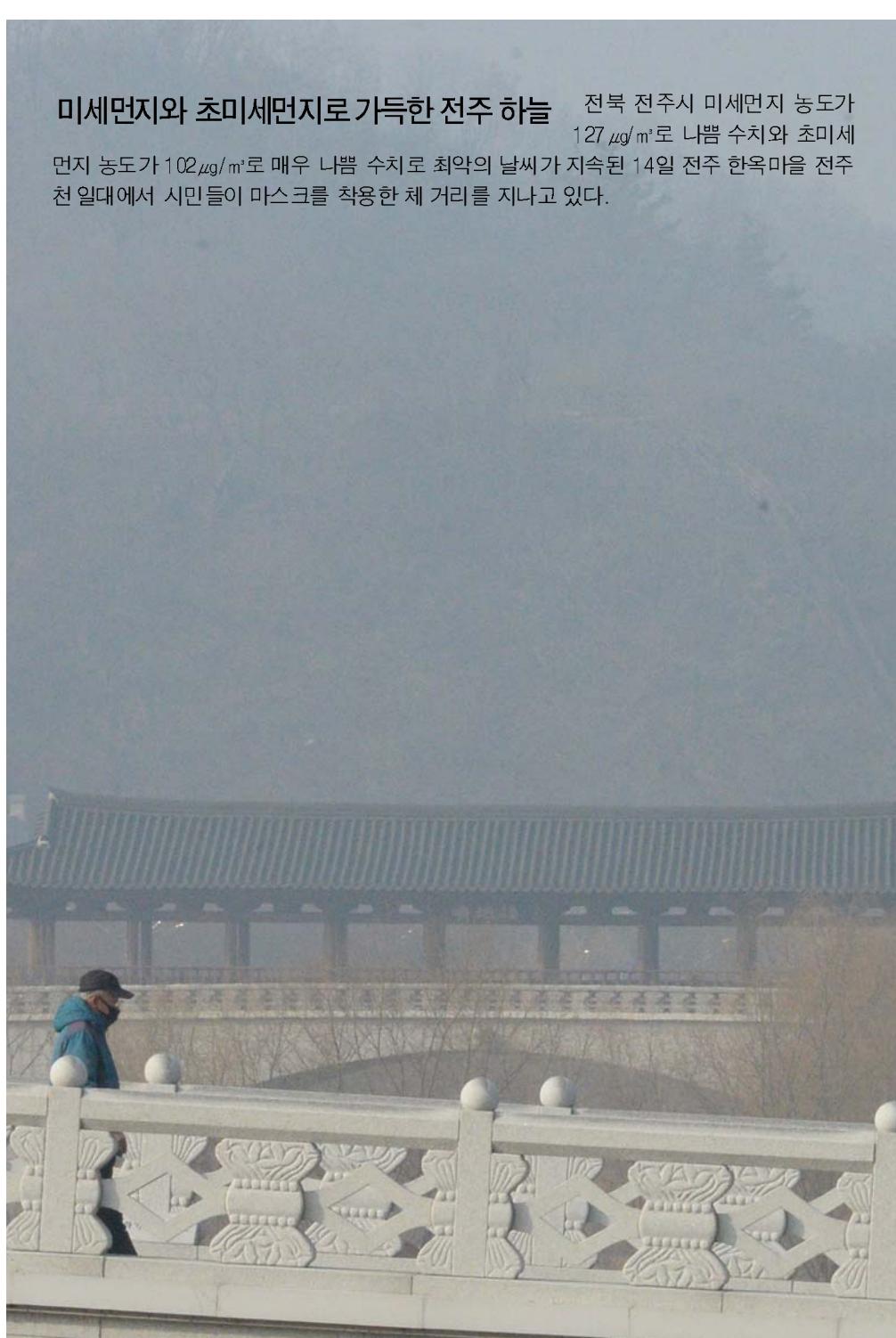
고김영삼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글을 날기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리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부족한자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또 원전 문제 등 현 정부의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책적 견해 치어를 예술화 시사했다.

김 상임이사는 대선 직전인 지난 2017년 4월 시 대정신인 회합과 통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라며 상도동계 인사들과 함께 문 대통령 지지 를 선언했고, 대선 직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 다도해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4곳 신규 지정

#### 멸종위기 수달·섬개개비 서식지 소도 포함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14일 멸종위기 아생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보길·소안도지구 소도와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내 3개소를 포함해 총 4개소(8만9815m<sup>2</sup>)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18년 12월31일부터 2037년 12월31일까지다.

소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소안도지구에 속한 섬으로 멸종위기 아생생물 I급인 수달이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또 멸종위기 아생생물 II급 섬개개비가 번식을 위한 서식처로 삼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일원에는 멸종위기 아생생물 I급인 수달과 II급인 유학나무돌산호가 서식한다.

특히 유학나무돌산호 서식지는 낚시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섬 출입 제한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며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